



유럽연합과 유로존

김동겸 선임연구원

■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 실현을 위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¹⁾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로, 2011년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통합으로 출범한 유럽공동체가 그 효시로서²⁾, 1993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의 발효 이후 유럽연합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됨.
 - EU는 경제공동체인 EC의 기능에 유럽 공동의 외교·안보·법무·내무정책을 포괄함.
- 2011년 현재, 유럽연합은 2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원국 간 관세와 수입수량제한을 폐지한 관세 동맹(custom union) 체결, 상품·기술·인적자원·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역내 공동시장(common market) 형성, 경제통화동맹을 거치면서 통합의 정도가 심화됨.

■ 한편, 유로존(Eurozone)³⁾ 즉, EMU체제는 1999년 EU 15개 회원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를 제외⁴⁾한 1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출범한 단일 통화체제임.

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2)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6개국은 경제부흥과 전쟁준비를 위한 핵심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1951년에 설립하였으며, 1958년에는 로마조약의 발효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설립함. 그 이후 1967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통합이 진전됨.

3) 유로존(Euro Zone)은 유로지역(Euro Area)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으로 칭하기도 함.

4) 그리스의 경우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MU 1차 참가국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3개국의 경우 국민여론의 반대로 EMU 가입을 유보하였음. 한편,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EMU 출범 당시 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EU에 가입하면서 EMU에 참여하지 않는 예외조항(opt-out-from-EMU clause)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유로화의 도입은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필수사항임.

- 1989년 발표된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에 입각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유로화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통해 단일 통화체제인 EMU체제가 출범하게 됨.
 -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물가, 재정, 환율, 금리 등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기준(convergence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함.
 - － 경제수렴조건은 단일 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 사이의 경제환경을 동질화하기 위해 물가, 금리, 재정,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마련한 자격요건임.
 - 한편, EU는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과 더불어 통화통합 이후 유로화와 비참가국의 통화 간 환율 안정을 위해 신환율조정 메카니즘(ERM II)을 도입하였으며, 각국이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⁵⁾을 채택함.
 - － ERM II는 비참가국 통화의 대유로화 환율변동 폭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EU 신규 신규회원국들이 EMU 가입을 위해서는 ERM II 시스템 내에서 유로화와 자국통화 간 중심 환율을 설정하면서 최소 2년 이상 중심환율의 $\pm 15\%$ 이내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나⁶⁾, 그리스 사태를 시작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단일환율 적용에 따른 거시경제 불균형, 재정정책운용에 있어서의 회원국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첫째,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가지는 조기경보기능⁷⁾이 상실되어 회원국 간 거시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 단일 통화정책에 따른 단일환율 적용으로, 장기간 고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물가가 안정된 회원국에 비해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⁸⁾이 고평가 되어 수출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함.

5) 유로존의 경우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세제도 재정지출의 경우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자국의 정치적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재정통합의 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차선택으로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를 GDP대비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상황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GDP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2008년 EMU체제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EMU@10: Assessing the First Ten Years and Challenges Ahead”에서는 EMU 출범을 계기로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환리스크의 감소와 국경 간 거래비용의 하락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7) 자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가채무, 경상수지 적자 등과 같은 대외불균형의 확대는 통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금리 상승을 동반하며, 이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반영되어 대외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됨.

8)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상대가치와 물가차이를 교역비중에 따라 가중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통화의 평균적인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수치가 클수록 통화가치의 상승을 의미함.

- 회원국 간 실질금리의 격차가 발생하여⁹⁾ 물가상승률이 높은 즉, 실질금리 수준이 낮은 국가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재원이 이들 국가로 집중되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발생함.
- 둘째, 회원국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된 재정정책과 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일 통화정책과의 괴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더욱 더 증대됨.

〈그림 1〉 EU 회원국 현황 및 EMU 가입을 위한 경제수렴조건

EU 회원국 현황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
EU(European Union) 영국, 스웨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물가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p 이내
ERM(Exchange Rate Mechanism) II Candidate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금리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명목장기금리의 2.0%p 이내
Eurozone /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오스트리아(1999), 벨기에(1999), 프랑스(1999), 독일(1999), 필란드(1999), 이탈리아(1999), 아일랜드(1999), 룩셈부르크(1999), 네덜란드(1999), 포르투갈(1999), 스페인(1999), 그리스(2001), 슬로베니아(2007), 키프로스(2008), 말타(2008), 슬로바키아(2009), 에스토니아(2011)	재정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정부채무가 GDP의 60% 이내
	환율 가입 이전 2년간 환율변동폭이 ERM의 평균 변동허용 이내

주: 괄호 안의 연도는 해당 국가의 유로존 가입연도를 나타냄.

9) 물가안정에 치중하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의 하향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각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어 실질금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됨.